



## 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 
산업통상정책과

과장 이은청, 사무관 조성래  
(044-200-2211, 2222)

## 이낙연 국무총리,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전북·군산 지역 지원대책 마련 지시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3일(월) 오전 9시에 개최된 총리실 간부 회의(서울-세종 영상)에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전북·군산 지역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.
-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에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멈춘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드러내며,
  -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당장 시급한 중소 조선협력 업체와 근로자 지원방안 뿐 만 아니라,
  - 전북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대안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였다.

※ 국무총리 지시말씀 첨부

- 이날 지시에 따라 총리실,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원대책을 지역 의견수렴 등을 거쳐, 7월 중에 확정·발표할 예정이다.

-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와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전라북도 지역사회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조선소의 가동이 중단되어 참 안타까움
  - 현대중공업 측으로서는 조선업 불황과 일감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조선소가 지역경제나 주민들의 생활에 가졌던 의미를 생각할 때 매우 가슴 아픈 조업중단임
  - 저 자신도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조선 협력업체의 폐업과 근로자 실직 사태 등에 대해서도 노심초사하고 있음
- 총리실은 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람
  - 이번 대책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및 군산 지역에 특화된 지원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함
  - 우선 시급한 중소 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대책과 함께 지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등도 추가되어야 함
  - 이번 위기가 전라북도 경제의 근본적인 산업구조 혁신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농업이나 건설기계, 친환경자동차 부품 등 대안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람
- 총리실은 산업부 뿐 아니라 기재부, 고용부, 해수부,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독려하는 등 대책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람